

여야 강대강 대치...국감 '반쪽 출발' 불가피

오늘부터 20일 대장정...與 보이콧 방침에 野 "단독 진행"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26일 20일간 대장정의 막을 올리지만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반쪽 국감 등 파행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을 차수 변경을 통해 표결에 부친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퇴하고 대국민 사과를 할 때까지 모든 국회의사 일정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하는 등 상당히 강경한 반응이어서 정 의장이 최소한 확실한 사과를 하기 전까지는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지 않을 기세다.

협상 창구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사퇴 의사를 밝히고 지역구로 내려간 상황이라서 여야 간의 대화도 사실상 단절된 상태다.

이정현 대표는 25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국회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하고 "아무리 정권이 욕심나고 대권병에 환장한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서는 안 된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절대 사과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사퇴 요구나 형사 고발 움직임 등에 대해서는 아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 의장의 측근은 이날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일 뿐이며 의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의장이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국감 첫날부터 새누리당의 불참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야권은 새누리당이 불참해도 국감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공식화, '반쪽 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의 국회 의사일정 참여와 박근혜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수용을 촉구하며 맞불을 놔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집권당이 민생 국감을 보이콧하면 집권당에 의한 국정, 민생 발표작기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원내지도부는 상임위원장이 야당 소속이면 국감을 정상 진행하고, 여당 소속이면 국감장에 입장해 일단 대기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대기 상임위의 경우 첫날에는 오후 3시 이후 철수하고, 둘째 날에는 최소 오전까지 대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5일 SNS 계정을 통해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이(국정감사를) 개최하지 않으면 사회권을 국회법에 따라(야당 간사기 위임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내일 국감에 임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국감을 보이콧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있을 수 없는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께 거듭 진언드립니다. 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며 "흔자 가면 실패한다. 국민과 국회, 야당과 함께 가면 성공한다.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가 산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감 준비는 끝 정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국정감사장의 모습. /연합뉴스

국감 브리핑

"군장병 15%가 구타·가혹행위 경험"

국민의당 김동철

2014년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로까지 이어졌던 '윤일병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군대 내 구타와 가혹행위가 여전히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동철(광주 광산 갑) 의원이 24일 국방연구원의 '2015년 국방사회조사통계사업 정기조사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장병의 14.5%가 구타와 가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2%는 20회 이상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응답자 48.0%는 '2014년 발생한 임병장·윤일병 사건과 동일한 상황이 병영 내에 만연해 있다'고 답했다.

김동철 의원은 "정부가 윤일병·임병장 사건 이후 병영문화 개선책을 발표하면서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정착 등 군대 내 구타와 가혹행위를 근절해 줄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병영에선 이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KIST 박정희 동상 건립, 과잉 충성이 문제"

국민의당 김경진

국민의당 김경진(광주 북구 갑) 의원은 25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KIST가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설치작업 등과 관련, "과잉충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KIST는 지난 3월 10일 KIST 본관 옆에 'KIST 50주년 기념공원'을 조성했다. 박정희 동상은 기념공원 안에 건립됐다"면서 "KIST는 'KIST 50주년 기념 조형물' 등을 별도로 설치했는데, 이 곳이 정영



실 동상이 설치되어 있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박정희 동상은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부로 3억원을 투입, KIST 기념공원 안에 설치하고 정영실 동상은 KIST 기념 조형물에 자리를 내주고 옮겨간 것"이라며 "지난 4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KIST 방문에 앞서 박정희 동상을 세운 것은 과잉 충성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지도 국외반출, 북한 정밀타격에 노출 우려"

국민의당 최경환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 을)은 26일 세종시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지도 국외반출과 관련, "구글이 원하는 5000분의 1 디지털지도에 불과해 구글 어스(지구 전역 위성사진) 3차원 영상 지도를 겹쳐 사용할 경우 지도상의 좌표가 정확해져 북한의 포사격 등 정밀 타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그는 '구글이 구글 위성 영상지도와 우리 정부가 만든 5000분의 1 표준 디지털지도를 결합한 지도를 만들게 되면 지도상 오차가 15cm에 불과한 초고정밀 지도가 된다'는 한미연합사 국내 최고 디지털지도전문가의 분석을 설명한 뒤 "이 지도가 국외로 반출되면 대한민국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당 "논에 다른 작물 심어 쌀값 안정 시키자"

국민의당은 논에 벼 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해 쌀값 안정을 유도하는 내용의 쌀 가격 안정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이 지난 23일 내놓은 '식량 생산안정제 119조치'라 이름 붙인 이 정책은 앞으로 2년 동안 논 6만ha에 옥수수·콩 등 사료작물을 재배하도록 해 쌀값 하락률을 연평균 1.8% 감소시키고 변동작물금 5719억원을 절감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는 ha당 300만원 수준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보전하면 총 2700여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고 국민의당은 밝혔다. 이를 통해 쌀값 안정은 물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사료작물 생산 증가로 식량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점화되는 대선 레이스...잠룡들 '어젠다' 선점 경쟁

여, 모병제·전술핵 공론화...야, 공정·격차 해소 화두로

새누리당 내에서 내년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잠재적 대권 주자들 간 상호 정책 검증이 활성화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대권 주자들의 어젠다 선점 경쟁에 시동이 걸렸다. 대선 경선 모드로 전환될듯한 분위기가

다. ◇여권=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국회 토론회에서 대선에 출마할 경우 모병제를 공약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유승민 의원이 이를 뒤엎고 강연에서 모병제에 대해 "정의롭지 못하다"고 반대했다. 자신의 정책 구상을 관통하는 '정의' 개념으로 비판한 것이다.

또 김무성 의원이 '전문 직업군인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원유철 의원이 "시

각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는 등 모병제는 한동안 새누리당 내에서 쟁점이 됐다.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핵심 이슈로 떠오른 '핵무장론' 역시 관심을 끄는 쟁점이 됐다.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원 의원으로 자체 핵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론자인 유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했다. 남 지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술핵 재배치'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국내 문제에 언급을 삼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지난 15일 뉴욕을 방문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국제적 이슈가 된 핵무장론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반 총장은 당시 "세계 13위 경제 대국으로서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하지 않느냐"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공정'과 '격차·불평등 해소'가 야권 주자들이 꺼내든 내년 대선 의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자신만의 브랜드로 체화, 차별화를 꾀하며 우위를 점하려는 잠룡들의 '메시지 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문 전 대표는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더 평등한 경제'와 '공정한 세상'을 선보일 것으로 전해졌다.

정계 복귀 선언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상생'과 '통합'을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꺼내들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격차 해소', '평화통일'에 더해 '미래 대비'까지 3대 화두를 시대정신으로 꼽으며 강연 등 대외적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내건 시대정신은 혁신과 협치를 통한 불평등·불공정·불안 '3불(不)의 극복'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함께 만드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민주국가'를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제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